
대진 라돈침대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 대책 라운드 테이블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대진 라돈침대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 대책 라운드 테이블

라돈검출 대진침대와 관련하여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만들고 비닐 배포, 모델명 확인, 회수,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 단체가 받고 있는 1372 상담센터에는 5월 4일 이후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한 비닐배포 및 매트리스 회수(연도별 제한 없는 회수), 환불 및 보상, 건강불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어 집단소송과 방사능대책 시민단체 연대모임 및 환경보건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모임도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의 향후 활동방향을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보상 및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일 시 :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
- 주 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주 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프로그램

사회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시 간		내 용
10:40~11:00	20	등록
11:00~11:05	5	인사말 (강정화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05~11:20	15	발제1. 소비자 상담을 통해 본 대진침대 문제 임은경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20~12:00	40	토론1. 라돈침대 사례로 본 생활 방사선과 소비자건강 강건욱 교수 /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장
		토론2. 생활방사선의 현황 및 문제점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토론3. 라돈 침대사태의 법률적 검토 변웅재 /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토론4. 건강문제에 대한 소비자 운동방향 강재현 박사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12:00~12:55	55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2:55~13:00	5	정리 및 폐회

◇ 자료집 목차 ◇

발 제	1
소비자 상담을 통해 본 대진침대 문제 (임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토 론 1	17
라돈침대 사례로 본 생활 방사선과 소비자건강 (강건욱 /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장)	
토 론 2	21
생활방사선의 현황 및 문제점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토 론 3	29
라돈 침대사태의 법률적 검토 (변응재 /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토 론 4	39
건강문제에 대한 소비자 운동방향 (강재현 /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별첨 1] 대진침대 사건일지	45
[별첨 2]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 관리법	49
[별첨 3] 라돈침대 대책 보도자료 및 기자 의견문	65

<발제>

소비자 상담을 통해 본 대진침대의 문제

임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분석

발제자 : 임은경 사무총장

목차

- ▶ 상담접수 동향
- ▶ 소비자 상담 분석
- ▶ 대진 라돈침대 사태 이후 현황 및 문제점
- ▶ 소비자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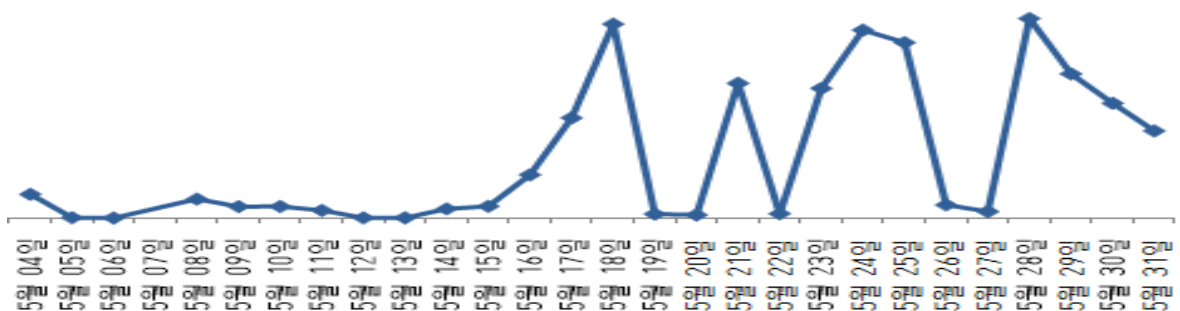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분석 기준

- ①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② 기간 : 2018.05.04. ~ 2018.05.31.
- ③ 사업자 : 대진침대(주)
- ④ 상담기관 : 민간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 ⑤ 총 건수 : 69,353건(총 상담), 10,751건(대진상담)
- ⑥ 분석 건수 : 10,376건

1. 일자별 상담접수 동향

- ▶ 5/4 ~ 5/31에 접수된 '대진침대' 상담(10,751건)은 전체상담(69,353건)대비 15.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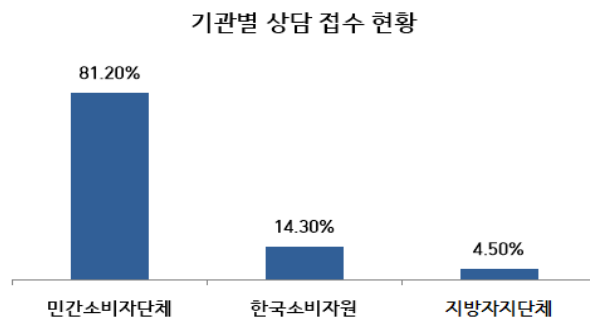
상담건수 현황



2. 접수기관별 상담현황

- ▶ 민간소비자단체에서 81.2%(8,43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이 14.3%(1,480건), 지방자치단체가 4.5%(466건)으로 진행.

접수기관	건수(건)	비율
민간소비자단체	8,430	81.2%
한국소비자원	1,480	14.3%
지방자치단체	466	4.5%
총합계	10,376	100.0%



3. 소비자 요구사항

- ▶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회수'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 기타(침대 모델명 확인, 모델명 확인·회수 방법·위험 여부 등), 피해구제신청(집단분쟁조정신청), 배상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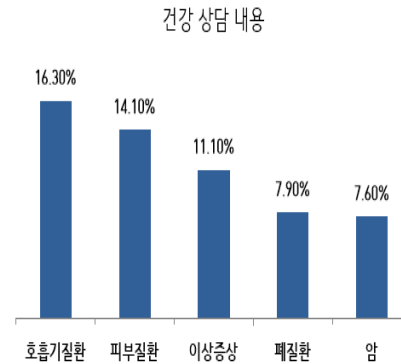
	건수	비율
회수	4,248	31%
기타	2,563	19%
피해구제신청(집단분쟁조정신청)	1,776	13%
배상	1,712	13%
환불	1,647	12%
매트리스 검사	656	5%
교환	462	3%
회신	350	3%
반품	173	1%
사과	9	0%
수리보수	1	0%
총합계	13,597	100%

복수응답으로 인해 13,597건으로 분석됨

4. 건강에 대한 상담

- ▶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상담을 많이 하였으며, 이상 증상 호소, 폐질환, 암 등의 순이었다.

건강이상증세 세부증상	건수(건)	비율
호흡기질환	549	16.3%
피부질환	474	14.1%
이상증상	373	11.1%
폐질환	266	7.9%
암	257	7.6%
건강악화	226	6.7%
신체적 정신적피해보상요청	210	6.2%
갑상선질환	207	6.1%
두통	203	6.0%
위염, 난임, 유산, 산부인과질환, 심근경색, 정신적 피해 등	.	.
총합계	3,373	100.0%



*분석상담 10,376건 중, 2,406건이 이상증세에 대한 상담을 접수.

*복수응답으로 3,373건으로 분석됨.

4. 건강에 대한 상담

▶ 상담사례1.

-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용하였으며, 2011년 프리미엄 그린슬리퍼를 사용중임. 아기는 2013년 제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지금 5살이 될 때까지 침대에서 쪽 같이 생활하였고, 소비자와 아기는 감기만 걸리면 기관지, 폐렴이 올 정도로 기침이 심했음. 또 최근 아기는 기관지 폐렴이 걸려 병원 치료를 2주를 받았음.

4. 건강에 대한 상담

▶ 피부과 질환

-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2010년 7월8일 제조) 침대를 사용하고 있음. 소비자는 사용 후부터 알수 없는 원인으로 등에 가려움증에 시달려왔고, 현재까지 같은 증세로 고생 중임.
- 많은 피부과와 수십차례 진료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못했고, 얼마전에는 간지럽다 못해 등이 아파 집중 검사를 함. 결과는 원인불명으로 판명됨. 미국에서 2달 정도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가려움증이 없었음.

4. 건강에 대한 상담

▶ 폐질환

-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음. 현재 소비자는 2018년 1월 초에 갑상선 기능저하증 판정을 받았고, 아이들은 일년에 1~2회 이상 알 수 없는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음.
- 결과는 기관지염으로 판정남.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네블라이저 호흡기 치료 중임.

5. 정부의 문제점 - 원스톱 체계로 접근못해

- ▶ 모델명 확인, 회수책임, 비닐배포, 건강 상담을 소비자가 4곳 모두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 대진침대와 연락이 된 소비자는 1%에 불과하며 문제가 발생한 후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대책이나 환불 등에 대한 소비자문제는 간과하고 있음.
- ▶ 또한 정부 대응체계 구성을 보면,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가 참여
- ▶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지 못함.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참여)

5. 정부의 문제점 - 원스톱 체계로 접근못해

- ▶ 5월25일자, 모델명 확인, 회수책임, 비닐배포, 건강 상담을 소비자가 4곳 모두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 <참고> 사안별 주요 연락처
- ▶ ○ 건강영향 상담 :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1522-2300, 평일 08~22시, 주말 09~18시), 온라인 Q&A, 이메일상담(radonhelp@kirams.re.kr)
- ▶ ○ 매트리스 수거 신청 : 대진침대 1544-4475, 02-538-2800, <http://www.daijinbed.co.kr>
- ▶ ○ 밀봉비닐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 ▶ ○ 기준초과 모델명 확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80-004-3355, <http://www.kins.re.kr>, helpdesk@kins.re.kr
- ▶ ○ 기타 Q&A :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www.nssc.go.kr>

5. 정부의 문제점 - 원스톱 체계로 접근못해

- ▶ 정부 대응체계 구성을 보면,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가 참여
- ▶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지 못함.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참여)
- ▶ 5월25일자, < 소비자 지원방안 >
- ▶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임.
- ▶ 지난 5월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6. 대진 침대 회수현황보고 및 회수체계 마련

- ▶ 대진침대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 회수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상황.
- ▶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편한 사람들(노년층,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안돼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 현장에 나가있는 원안위에 대진침대(주) 팩스 신청을 확인 요청
- ▶ 상담을 통해 소비자 접수요청후 1~2일후 대진침대(주) 확인문자가 오는 것으로 파악, 1-2일 후 확인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간주, 재접수요청함.
-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전주지회는 2018.05.09~2018.06.01 기간동안 83건의 팩스접수 중, 62건의 소비자가 문자 회신을 받지 못함.

6. 대진 침대 회수현황보고 및 회수체계 마련

- ▶ **5월25일자**,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며,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 수거 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자료(생산연도별 구분, 87,749건임)
- ▶ 불임자료 중 대진침대 매트리스 21종 분석·평가 결과에는 모델명, 피폭선량(mSv/년), 생산 연도, 생산량(2010년~)으로 구분 표기됨
- ▶ 대진침대㈜ 회수리스트에 연도별 구분에 따라 소비자 접수 안돼
- ▶ **5월 28일, '원안위는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기준초과한 21종 매트리스 '모델'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음' 발표**
- ▶ 대진침대㈜ 추가 10종에 대해서 연도구분, 회수 접수조차 안돼

6. 대진 침대 회수현황보고 및 회수체계 마련

- ▶ 원안위 관계자, 팔호안의 연도는 해당제품 실제 생산연도로, 해당연도 전후로는 생산자체가 되지 않으며, '웨스턴 슬리퍼'는 모든 연도에 대해 수거요청했으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다시한번 명령했음에도 업체에서 강하게 반발, 홈페이지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6월1일).
- ▶ 6월 4일자 대통령· 국무총리 주례회동, 8만8천개 우체국망 통한 수거 발표
- ▶ 소비자 상담요청, 우체국망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
- ▶ 6월7일, 국무조정실 확인, 현재도 논의중
- ▶ <상담사례>
 - 5월 18일 대진침대 회수 접수를 함. 회수가 안되어 화물로 직접 배송 의뢰함.
 - 6월 7일 천안 대진침대에 도착을 했는데 해당 모델이 아니라고 회수 거부함.
 - 현장에서 화물기사와 분쟁 중에 있다고 급하게 문의함. (2011년 웨스턴 슬리퍼)

대진침대(주) 회수문(6.7): 정부 회수사이트 안열어

▶ 온라인 신청 접수

- ▶ 해당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아래의 **교환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동급의 매트리스로 생산일정에 따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 ▶ 제품 회수는 일시에 많은 물량을 회수해야 하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회수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빠른 대응이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며, 임직원 일동은 총 매진하여 소비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 필수항목 표시
- ▶ 5. 정부의 문제점 : 회수관련 대응 미흡
- ▶ 매트리스 모델명 * , 네오그린 헬스 (단종모델), 네오그린슬리퍼 (단종모델), 그린헬스 I (단종모델)
- ▶ 그린헬스 II (단종모델), 파워그린슬리퍼 R (단종모델), 파워트윈플러스 (단종모델), 파워플러스포켓 (단종모델)
- ▶ 로즈그린 슬리퍼(단종모델), 프리미엄 웨스턴 슬리퍼 (단종모델), 프리미엄 그린 슬리퍼 (단종모델)
- ▶ 파워그린슬리퍼 힙노스 (단종모델), 그린 슬리퍼 (단종모델) - 2010년 부터 2015년 까지의 생산분
- ▶ 벨라루체 (Bellaluce) - 2015년 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생산분, 모젤(Mosel) - 2015년 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생산분
- ▶ 뉴웨스턴 (New Western) - 2005년 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생산분, **웨스턴슬리퍼 - 2012년11월부터 2016년10월까지**
- ▶ 파워그린 슬리퍼 플래티넘 - 2014년 부터 2018년 2월 까지의 생산분
- ▶ 파워그린 슬리퍼 라임 - 2014년 부터 2017년 8월 까지의 생산분, 아이파워플러스 슬리퍼 -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 ▶ 아이파워그린 -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생산분, 아르테 - 2015년 부터 2018년 2월 까지의 생산분

7. 소비자 피해보상안 구체적 마련

- ▶ 교환·환불·반품 16%, 배상 13% 순임. 소비자들은 침대 구입가 환불, 치료비·검사료·건강검진 등의 신체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 ▶ 구입가 환불의 경우 기한이 오래 경과되어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움.
-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건 역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 있으나 공동 피해범위와 보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걸리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없어(개시 60일, 최고 15일 등)
- ▶ 구체적 소비자 피해보상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8. 건강 역학조사 실시

- ▶ 5월 한달 대진 라돈 침대 상담 10,376건 중 건강상 문제로 호소하는 상담은 2,406건(다중응답으로 3,168건)으로 전체 상담의 23.2%로 분석됨.
- ▶ 상담 내용으로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6.3%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 14.1%, 이상증상, 폐질환, 암 순서로 각각 11.1%, 7.9%, 7.6%로 나타남.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두통, 유산, 난임, 부인과 질환, 정신적 피해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
- ▶ 폐관련질환으로 국한하지 말고 피해자 건강 역학조사 필요

9.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리 주어야

- ▶ **대진 침대 피폭선량 조사결과 및 기타 침대 및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및 피폭선량 결과 발표**
- ▶ 소비자 상담 중 대진침대 24종 중 제외된 3종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비자의 상담 및 기타 매트리스에 대한 검사요청, 생활 속 음이온 제품에 대한 막연한 소비자의 불안감 가중
- ▶ 모나자이트 유통에 따른 조사 방법,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Memo

종 합 토 론

<토론 1>

**라돈침대 사례로 본
생활 방사선과
소비자 건강**

강건옥 / 서울대병원 핵의학 과장

라돈침대 사례로 본 생활방사선과 소비자건강

강건욱 교수(서울대병원 핵의학과장)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자연방사성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국제건강기구 WHO에서는 실내 공기 중 100 Bq/m^3 의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 Bq/m^3)과 2018년부터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200 Bq/m^3)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라돈농도를 측정하여 웹사이트에 공표하는데 2014년 전국 주택 9315건 측정에서 $8 \sim 2821 \text{ Bq/m}^3$ 로 주택간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116 Bq/m^3 이었다. 유럽통계에 따르면 라돈에 의한 폐암 위험은 30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75세까지 누적위험도는 비흡연자의 경우 1000명 중 1명인 반면 흡연자는 1000명 중 20명이다. 환경부에서는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자연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2017년 교육부가 실시한 측정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4%에 해당하는 408개의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148 Bq/m^3)을 초과하였으며 최고 389 Bq/m^3 으로 나타나 저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위험에 대한 국민관심이 증가된 가운데 저렴한 라돈측정기가 판매됨에 따라 침대에서 유의한 수준의 라돈이 발견되었다.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모나자이트라는 자연방사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광물을 침대에 넣었기 때문이다. 침대별로 라돈은 $1 \sim 68 \text{ Bq/m}^3$ 수준으로 주택 실내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토론은 $220 \sim 1364 \text{ Bq/m}^3$ 로 매우 높았다. 단 토론의 경우 반감기가 55초로 금방사라져 라돈에 비해 인체 영향은 작다. 피폭수준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1.6 \sim 9.4 \text{ mSv}$ 였다. 조사한 침대 중 가장 높은 9.4 mSv 는 라돈으로 환산시 200 Bq/m^3 로 전국 주택 1.5%의 실내 공기 농도는 이보다도 높다. 이는 30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75세까지 폐암 누적위험도가 비흡연자의 경우 1000명 중 2명, 흡연자의 경우 40명에 해당한다. 방사선은 자연방사선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하며 피폭이 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는 라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소비자 모두 저감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방사능무섭니? 증보3판, 고려의학 2016
2. ICRP 간행물 115. 라돈과 자손핵종에 의한 폐암 위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Memo

<토론2>

생활 방사능의 현황 및 문제점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생활방사능의 현황 및 문제점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1. 라돈침대 사태와 생활방사능 관리 문제점

○ 개요

- 5월 3일 SBS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보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2010년부터 침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스폰지 등에 모나자이트 파우더를 사용해왔음(피해자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제품에서도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음)
- 대진침대는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침대를 ‘피로예방, 숙면유도, 집중력강화, 숲속 같은 맑은 공기를 만드는 음이온을 방출한다’며 ‘음이온 인증’을 받고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 까지 받는 등 다수의 정부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함
- 정부가 발표한 3차례 조사결과,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모나자이트 사용 24개 모델 중 21개 모델에서 사용자에게 야기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치 1밀리시버트(1mSv)를 초과(최고 13배 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남(총 87,749개)

○ 문제점

- 대진침대 사용자는 방사성물질에 사용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도 없이 정부가 인증해준 친환경마크와 K 마크 등을 믿고 침대를 구입하여 사용해왔음
- 모나자이트는 희토류 원광 및 토륨광으로 일반광물에 비해 방사능 농도가 2천배 높은 고방사성물질로 산업원료로 지정된 물질이나 일반 생활밀착형 제품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어 옴
- 모나자이트 수입업자는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안위에 수입량 등록 및 모나자이트 판매업체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추적관리는 실종
- 원안위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판매업체 리스트를 통해 모나자이트가 침대회사에 공급된 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방치함(대진침대 역시 모나자이트가 방사성물질인 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자력안전재단이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음이온 방출 가공제품 샘플 조사에서도 대진침대는 제외되었으며 라돈과 토론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음이온 방출 원리와 음이온의 건강상 영향

○ 음이온 방출 원리

- 국내 음이온 시험기관인 한국원적외선협회의 협회보에 따르면 음이온제품의 음이온 방출원리는 방사선을 방사시키는 희토류광석(모나자이트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광석법’, 단전기를 사용하여 직접 음이온 발생시키는 ‘전기발생식’, 폭포가 암석에 마찰되어 미세한 물 입자로 부서지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 미세한 음이온 입자를 생성하는 ‘레너드식’까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되고 있음

- 천연광석법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들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는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원료와 음이온 원료의 음이온 및 방사선량을 측정결과 음이온과 방사선량률이 비례하는 결과 확인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2)

○ 음이온의 건강영향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 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다고 밝히며,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여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어 수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품 취득시에는 폐기를 권고하고 있음(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17)

- “당신이 음이온제품을 알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누군가를 아는 경우에, 우리의 최고의 충고는 멀리 던지라는 것이다”.(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 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 존재하지 않음(원자력안전위원회, 2018.2)

○ 라돈

- 암석이나 토양, 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WHO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라돈을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 원인물질로 지정함

- 미국 환경청(EPA)은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105 이상(21,000명)이 라돈과 라돈자손에 방출되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망

한다고 밝힘

-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13)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발생위험도를 연구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각각 12%, 12.6%로 추정하였음

3. 생활 속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범위

○ 천연방사성 핵종의 종류는 모나자이트, 토르마린, 인광석, 티타늄 등 70여종에 이름

○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범위

- 건축자재(시멘트 벽돌, 석고보드, 바닥재, 단열재, 내장재, 장식재, 페인트 등

- 생활 및 사무용품 : 옷장, 침대, 책상, 장신구, 벽지 등

- 가공제품: 온열 매트, 라텍스, 생리대, 속옷, 화장품, 안대, 마스크, 허리호보대, 목걸이, 팔찌 등

○ 특허청에서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한 개수가 18만개라고 알려질 만큼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음이온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4. 천연방사성핵종 사용 관련 생활방사선 관련 법

○ 생활방사선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규정한 방사선을 의미하며 정식 명칭은 ‘생활주변방사선’임

○ 생방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생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은 다음 4가지를 말하고 있음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방사선(우주방사선)

3) 지구 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재활용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법령 제정 배경 및 안전관련 기준

○ 배경

- 2007년 과학기술부가 <건강침대>로 불리는 A사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일반인 연간 허용기준치보다 9%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고 확인(매일 6시간 이상 사용시 조건), 과기부는 ‘A사의 제품 2-3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추가 방사능 유출량 조사

할 계획'이라며 피폭선량이 기준치 초과하면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힘. 방사능 대량 유출되는 정확한 원인을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의 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원소인 '토륨'이 다량 함유돼 있어 방사능을 유출하고 토륨에서 발생하는 라듐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수입해 돌침대, 음이온 팔찌 등 생활용품에 활용되고 있음(화학저널 2007.2.8. 보도)

- 이후 정부가 생활 속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유아무야되었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고철 수입으로 방사능폐기물 수입 논란이 일자 2011년 7월 재활용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포함하여 법 제정에 이르게 됨(2012년 7월 시행)

○ 안전관리 규정

-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는 취급자 등록하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현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할 때마다 원안위 신고하여야 함

-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①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②가공제품에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아니할 것 ③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사람이 피폭되는 양이 원안위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 포타슘40의 농도는 그램당 1벵크렐(1Bq/g), 그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벵크렐(0.1Bq/g)

-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벵크렐

*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 포타슘40의 농도는 그램당 1벵크렐(1Bq/g), 그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벵크렐(0.1Bq/g)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 기준 등

-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함. 다만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 화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하여서는 안됨

6.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안전규제의 문제점

- 천연방사성물질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현황 등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안됨
-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등의 방사능농도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상은 가공제품의 피폭선량 초과 여부에 대해서만 규제
- 천연방사성물질 제조업자 또는 취급자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추적관리 규제가 아니라 시중 유통되는 음이온 제품의 극히 일부 샘플조사 통해 규제함
- 산업원료로 지정된 모나자이트 같은 고방사성물질이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모나자이트 취급자 및 제조업체,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
- 가공제품의 선량한도에 라돈 및 토론 흡입으로 인한 피폭은 내부피폭 선량으로 고려하지 않음

7. 개선대책 제언

- 1)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유통 현황 조사 및 방사능검사결과 공개
- 2) 음이온 제품 사용에 대한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 3)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의 가공제품 사용금지
- 4)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 도입
- 5)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건강 조사 실시 등 피해자 대책 마련
- 6)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안전대책 마련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

<토론3>

라돈 침대사태의 법률적 검토

변용재 /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라돈침대사태의 법률적 검토

2018. 6. 8.

변응재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Table of Contents _____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검토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검토
3. 제조물책임법상 검토
4. 분쟁해결 방향 검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검토

• 용어정의

원료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 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공정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검토

• 가공제품의 정의 및 규제

가공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이슈: 원료물질을 어떻게 파악하나?) <p>법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검토

• 가공제품의 규제

가공제품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 화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슈: 장난감, 화장품 제품은 제한적 열거인지 아니면 예시적 열거인지?)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고시된 기준 있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검토

• 가공제품의 규제

가공제품

• 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 및 원인 3.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슈: 보상 포함 가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검토

• 가공제품의 규제

가공제품

- 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관련 조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는 관련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검토

•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검토

• 침대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구입가 환불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침대 내용 연수: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부품보유
기간: 1년)
- 침구류(이불, 요, 침대커버): 내용연수 3년

제조물책임법상 검토

• 제조물 결함의 정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제조물책임법상 검토

• 제조물 책임

제3조(제조물 책임)

-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슈: 판매자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검토

• 제조물 책임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물책임법상 검토

• 제조물 책임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해결 방안 검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신속한 잠정적 조치 필요

적절한 단계적 분쟁해결 기준 설정 필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토론4>

건강문제에 대한 소비자 운동방향

강재현 /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건강문제에 대한 소비자 운동방향

강재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시장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이번 대진침대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는 정보의 부재, 사실과 다르고 비윤리적인 광고, 그리고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 등이다.

1) 정보의 부재

매우 흔히 소비자들은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적절한 결정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 라돈침대 사건에서도 이 침대가 정말 건강에 효과가 있는지와 유해성은 없는 지에 대해 소비자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 된 것이 문제이다.

2) 사실과 다르고 비윤리적인 광고

소비자는 조직화되지 못한 시장에서 잘못된 측정방법과 정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최근에는 잘 조직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홈쇼핑이나 쇼핑몰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제품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이 문제이다.

3)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공산품 등이 각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평가·관리되고 있어 특정 물질이 다양한 노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나누어진 화학물질 관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합하여 인체 적용제품 및 그 성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사실 2007년에도 국내 한 업체가 생산한 온열매트에서 다량의 모나자이트가 발견되어 방사능을 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생활 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바 있다. 문제는 이 법이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

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가공제품을 만든 제조업자는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강문제에 대한 소비자 운동의 방향은 아래와 같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안전할 권리

약, 식품,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2)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소비자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대기, 물, 소음 공해나 오염 등이 모두 해당된다.

3)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절한 교육과 지도 없이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이 권리는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소비자 운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문제에 대한 소비자 운동방향은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심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체와 국가기관들이 소비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별첨1>

대진침대 사건일지

날짜	내용	비고
05.03	- SBS 방송이 침대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된다고 보도	sbs
05.07	- 대진 침대 사업자 측에서는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힘	대진
05.10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도 뒤 곧바로 진상조사를 벌여 1개 침대에 대해서만 조사 분석을 한 뒤 측정값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10일 1차 중간발표를 함.	원안위 1차 발표
05.15	-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법적으로 제한된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원안위 2차 발표
05.16	11개 단체 합동 성명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11개 단체
05.16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환경보건 시민센터
05.1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진 침대 라돈 사태 피해 대책 1차 모임 - 대진 라돈 침대 피해 대책을 위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 작성과 5/21(월) 오전 11시 기자회견 준비와 1372 상담장 2,000 여건 분석을 진행함.	소협
05.21 am11 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진 침대’ 소비자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 라돈 사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업체와 정부의 대응방식, 조속히 피해접수 및 처리를 함으로써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	소협
05.21 pm4시	- 7종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대진침대에 수거, 폐기 등 조치 명령 - 나머지 17개 중 16개 매트리스는 시료를 확보하여 검사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 - 대진침대는 5월 19일 원안위의 수거.폐기 명령에 따라 현재 자체물류창 등을 이용하여 수거 중 - 5월 24일부터는 추가 역량을 투입하여 하루 2천개 이상 수거하여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기로 함.	원안위 발표
05.22	- 태울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내는 소송과 대진침대를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	태울
05.25	-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	국무 조정실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05.2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진 침대 라돈 사태 피해 대책 2차 모임 - 1372 상담원의 소협 차원의 상담 가이드 마련, 5/4~5/17까지의 상담분석 내용 보도 - 자료 작성, 앞으로 행동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소협
05.29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간담회 - ‘라돈,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토론회	김경실의원 주관
05.30	‘1372 소비자상담센터 대진 침대 관련 상담분석’ 보도자료 배포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월 4일에서 5월 17일까지 접수된 대진 침대 관련 상담 1,631건 중 중복 상담을 제외하고 1,518건을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함.	소협
05.30	‘라돈 침대’ 사태와 시민안전 긴급좌담회 -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11개 단체 주최
05.30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중국산 라텍스 매트리스를 라돈 측정기와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한 뒤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환경보건시민센터
05.31	-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 원안위와 강 위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기로 함. - 소비자주권회의는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 제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06.04	제36차 주례회동 보도자료 발표 - 이낙연 총리는 6월중 약 8.8만개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체국망을 이용한 수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발표할 것을 지시함.	국무조정실

<별첨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5호, 2016.3.2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

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 ②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분석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4항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

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1.>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 취급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감시기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 현황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목개정 2014.5.21.]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

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7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㉔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9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등록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벵크렐을 초과하는 우라늄 235(붕괴계열 내의 핵종을 포함한다. 이하 우라늄 238과 토륨 232에서 같다), 우라늄 238 또는 토륨 232를 포함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방사능량이 핵종별로 1천킬로벵크렐을 초과하는 자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을 초과하는 포타슘 40을 포함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방사능량이 1만킬로벵크렐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연간 취급 총량 및 방사능량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4.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6조(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취급자와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선량한도[이하 "선량한도"(線量限度)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연도별 측정 및 평가
2. 분기별 작업장의 방사선량률(방사선량의 시간적 변화율을 말한다) 측정 및 평가
3. 종사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4.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제7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 및 원인
3.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조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는 관련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의하여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 및 기록
 - 가. 비행노선, 비행고도, 위도 및 경도
 - 나. 승무원의 비행시간
 - 다.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 라. 그 밖에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조치
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항·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제12조(감시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중 감시기를 설치할 위치의 선정, 감시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전문적·기술적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전문개정 2016.5.31.]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 조사의 기간·방법 및 절차
3.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제14조의2(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2. 감시기의 고장·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4.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3.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1.]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 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5.3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 승계 신고
 -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
 -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 보고
 -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보고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분석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8.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건비: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7972호, 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을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5.] [총리령 제1301호, 2016.7.15.,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취급자 등록 변경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 등록증

제4조(취급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 등록증

제5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제8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와 보고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수량, 제조일,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현황
2. 부적합한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3. 부적합한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4.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5. 재발방지대책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할 것
3. 감시기의 점검·관리 방법 및 점검·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
4. 감시기 고장·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 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방사능 감시방안

[본조신설 2016.7.15.]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2.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7.15.>
4. 삭제 <2016.7.15.>
5. 삭제 <2016.7.15.>

제10조(유의물질 조사·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01호, 2016.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

라돈침대 대책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안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필요
‘모나자이트’ 사용된 생활용품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접수와 보상 마련돼야
소비자단체는 피해사례 분석 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
정부는 신속한 회수 및 검사 조치를 마련하라!!

대진침대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가 넘는 위해 수준이며, 생활 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나자이트” 관리 부재 등 규제 당국의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허점이 확인되었다. 최초의 라돈침대 사태는 소비자 안전사고가 여전히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이 몇 년간 유통되고 있어도 관리되지 않고, 위해성이 파악되어도 제대로 수리조치 되지 않고 있다. 피해 소비자는 여전히 전문적 상담과 피해접수 창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와 11개 회원 단체는 관계 당국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접수, 피해보상 논의가 가능한 상담창구를 마련하라!!

둘, 위해 제품을 포함한 라돈침대 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과 규제 당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라!!

셋,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라돈침대 이용 소비자에 대한 피폭 검사 방안 마련과 제공, 건강 상의 위해 평가를 실시하라!!

넷, 향수 등 음이온 발생 제품 등 방사능 발생 우려가 큰 생활용품에 대한 전면 조사 및 대응책을 마련하라!!


다섯, 사업자에 의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과 이를 이행토록 하는 소비자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라!!

향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사례 분석,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침대나 공산품, 생활용품 등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결방안이 부족하거나 지연될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약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보 도 자 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mall>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mall>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18년 5월 18일(금)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임은경 사무총장(010-3437-1780)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5월 2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 -

라돈 침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연락 두절과 회수지연을 조속히 해결해야 해
“빠른 피해처리를 위한 소비자단체 상담센터 가동,
정부는 신속한 회수 및 검사 조치를 마련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는 ‘대진 라돈 침대’로 인한 소비자단체 상담이 1,200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회수조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5월 21일(월)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앞)에서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가 받고 있는 1372 상담센터에는 5월 4일 이후 소비자상담이 1,2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리콜 및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는 물건을 집안에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번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결과, 대다수의 상담이 회수를 요청하고자 업체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200건의 건강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주로 폐·천식 호흡기·갑상선·난임·산부인과 질환 및 암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1:00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광화문 KT 앞)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 참여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및 100여명 회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 여는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 규탄 발언

- 발언1. 라돈침대에 따른 소비자 불만
- 발언2. 건강 피해 호소 상담내용 발언
- 발언3. 암 발생 및 갑상선 결절 등 피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mall>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mall>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18년 5월 30일(수)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임은경 사무총장(010-3437-1780) 김미경 팀장(010-4735-2247)

1372 소비자상담센터 대진 침대 상담 1,518건 중 건강 관련 142건

호흡기, 암, 천식, 폐질환 관련 상담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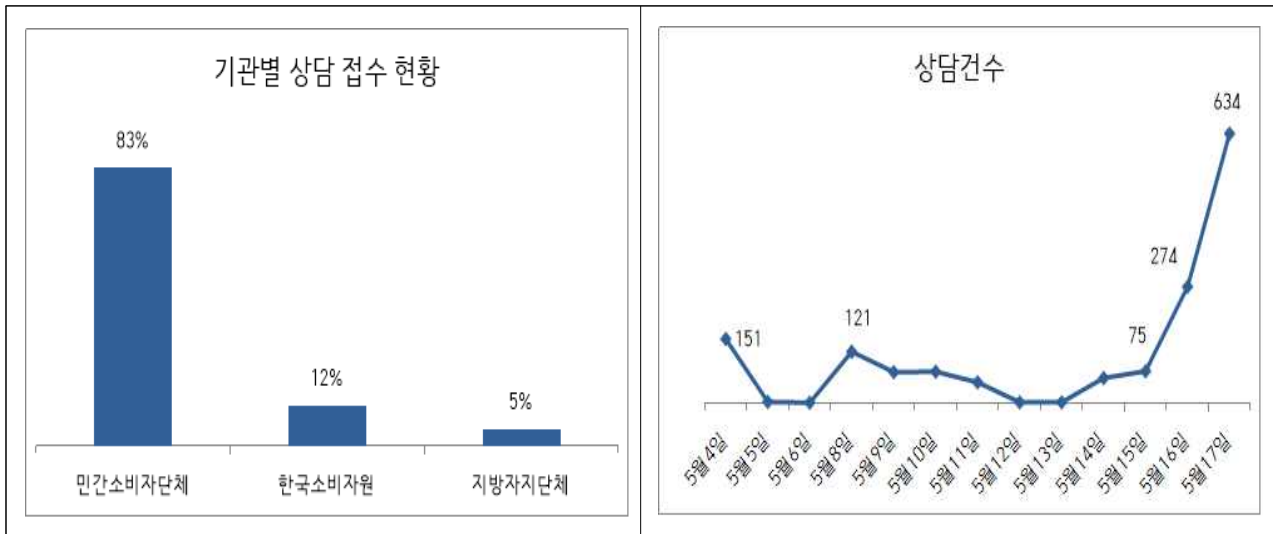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은 대진 침대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상담 1,631건 중 상담중복 등을 제외하고 1,518건을 분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라돈 침대 사고 조사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앞서 확인된 7종과 더불어 총 21종의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결함이 드러나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사업자인 대진 침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우왕좌왕하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대진 침대 회수, 피해보상, 건강 문제 등에 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진침대 7종 기준치 이상’을 발표한 원안위 2차 발표 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급증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월 4일에서 5월 17일까지 대진 침대 관련 상담 1,518건을 살펴보면 라돈 검출 관련 언론 보도가 방송된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증가하였다. 그 후 7일 대진 침대 사업자 측에서는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부로부터 방사선 측정 등 정밀조사를 받고 있으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후인 8일에 121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나타났고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발표에서 기준치 이상 되는 모델을 7종 발표함으로써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 1,631건 중 983건인 64.8%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나타났다.



■ 1,518명 피해 소비자 중 대진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해

- 피해 소비자는 회수, 환불, 배상, 교환 등을 요구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에 2,000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할 거라고 발표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대체 매트리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환불은 가능한지 등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피해구제와 분쟁조정만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연결이 된 소비자는 16명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답답함을 하소연하면서 회수(289건), 환불과 배상, 교환 등을 상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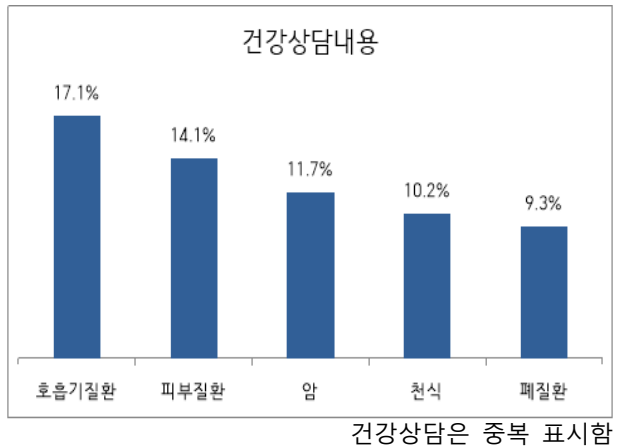
실제 상담내용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기존 침대를 수거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방사선량에 노출되었는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상담 등이었다.



■ 전체 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 142건으로 조사돼

- 건강 상담 내용 중 호흡기, 피부 질환, 암, 천식, 폐질환 순서로 나타나

대진 라돈 침대 피해 소비자들 중 건강상 문제로 호소하는 상담은 142건으로 분석되었다. 상담내용으로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 14.1%, 암, 천식, 폐질환 순서로 각각 11.7%, 10.2%, 9.3%로 나타났다. 또한 갑상선질환과 갑상선 암 관련 상담이 10.7%였으며, 난임, 유산, 산부인과 질환이 7.8% 순이었다.



■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

국무조정실에 범정부대응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라돈 발생 침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그러나 모델명 확인, 회수책임, 비닐배포, 건강 상담을 소비자가 4곳 모두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진침대와 연락이 된 소비자는 1%에 불과하며 문제가 발생한 후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대책이나 환불 등에 대한 소비자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이는 정부 대응체계 구성 중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서 더욱 자명하다.

이번 방사성물질은 안전적 측면에서 중차대하다. 그러나 소비자 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대진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대진 침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 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 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다. 1일 2천대씩 수거한다고 하나 여러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둘, 침대 회수 후 피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불안한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은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재력을 담보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대진 침대와 어느 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분쟁조정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보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매트리스를 받은 소비자들 역시 라돈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대진 침대를 믿을 수 없다는 등 소비자불안이 큰 상태이다. 이를 위해 침대의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빠른 입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 카드업체는 대진 침대 할부결제취소(할부항변권)를 인정하라!

더욱이 신용카드로 침대를 구입한 경우 소비자들은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졌으나 신용카드사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만 급급하다. 신용카드사들은 즉각적인 할부변제를 중지해야 한다.

향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진 침대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5월 17일 이후의 상담 분석 및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 5월4일~5월17일 일별 상담 건수 동향


상담일자	상담건수
5월4일	151
5월5일	3
5월6일	1
5월8일	121
5월9일	73
5월10일	74
5월11일	49
5월12일	2
5월13일	2
5월14일	59
5월15일	75
5월16일	274
5월17일	634
합계	1,518

□ 7종 모델별 상담 건수 동향

모델명	상담건수
뉴웨스턴슬리퍼	178
웨스턴슬리퍼	120
네오그린헬스	124
모젤	30
그린슬리퍼	26
벨라루체	15
그린헬스2	14
파워트윈플러스	13
합계	520

□ 5월4일~5월17일 일별 상담 중 건강상담 내용에 관한 상담 분석

건강상담 내용		상담건수	백분율
호흡기질환		35	17.1%
피부질환		29	14.1%
암		24	11.7%
천식		21	10.2%
폐 질환		19	9.3%
두통		15	7.3%
갑상선 질환		14	6.8%
갑상선 암		8	3.9%
난임		7	3.4%
산부인과 질환		5	2.4%
유산		4	2.0%
위염		3	1.5%
스티븐존슨 증후군		1	0.5%
심근경색		1	0.5%
기타	이상 증상	8	3.9%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 요청	4	2.0%
	신체 정밀 검사 요청	3	1.5%
	건강악화	1	0.5%
	방사능 검사요청	1	0.5%
	심리불안	1	0.5%
	정신적 피해	1	0.5%
총합계		205	1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mall>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mall>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18년 6월 7일(목)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임은경 사무총장(010-3437-1780) 김미경 팀장 (010-4735-2247)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기자회견 개최

- 6월 8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 -

‘대진 라돈 침대’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제품 회수는 물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안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는 6월 8일(금)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앞)에서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관련 내용과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5월 한 달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는 69,353건으로 그 중 ‘대진 라돈 침대’ 관련 상담이 10,695건으로 전체 상담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4일 정부는 우체국 망을 동원해 이번 달 말까지 대진 라돈 침대 8만 8천개 수거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질적인 환불 절차 및 라돈 침대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기자회견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에서 ‘대진 라돈 침대 및 생활속 방사선 안전 대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향후 활동 방향을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보상,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00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광화문 KT 앞)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 참여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및 100여명 회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 여는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 규탄 발언

-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 한국부인회총본부 남인숙 회장
- 대진 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피해자
- 성북구 소비자 김영미
-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계순 사무총장
- 한국YMCA연합회 이건열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mall>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small>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18년 6월 8일(금)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임은경 사무총장(010-3437-1780) 김미경 팀장(010-4735-2247)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 1372 소비자상담센터 5월, ‘대진 라돈 침대’ 관련 상담 1만건 넘어서
- 건강상 상담이 2,406건, 23.2%로 주로 호흡기, 피부질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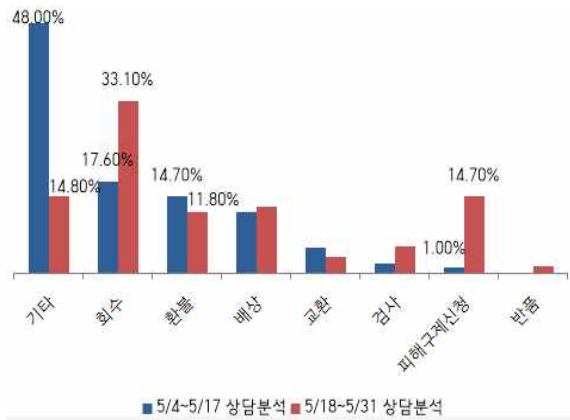
5월 한 달간 1372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69,353건 중 대진 침대 관련 상담은 10,751건으로 전체 상담의 15.5%를 차지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는 접수된 10,751건 중 중복을 제외하고 10,376건의 상담을 2차로 분석하였다.

지난 5월 21일 정부가 침대 수거 조치 명령을 내린 후 리콜 대상 침대 가운데 현재까지 수거된 것은 4천 5백여 개에 불과하며, 정부가 우체국 망을 이용해 신속히 수거하겠다는 발표(6월 4일)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발표 이후 피해 소비자들은 수거업체가 우체국 망이 변경되어 회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팩스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침대 회수는 언제 되는지, 피해보상·건강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 5월 대진 라돈 침대 관련 상담, 1만 건 넘어서, ‘침대 회수’ 4,248건으로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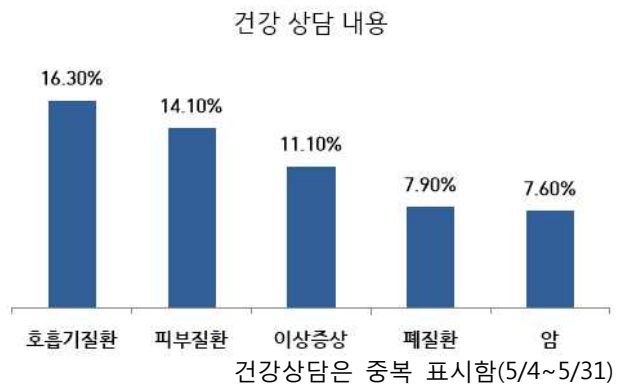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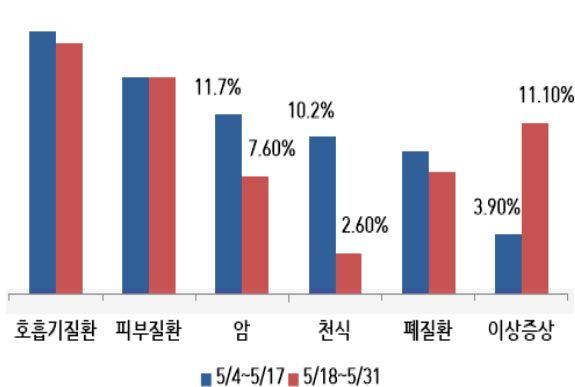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제보가 나온 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인과 대응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대진 라돈 침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중 대진 라돈 침대 관련 상담은 10,376건으로 상담이 시작된 5월4일 이후부터 5월 17일까지 상담건수는 1,518건이며, 5월 18일 이후의 상담 건수는 8,858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침대 회수가 4,248건인 31%로 가장 많고, 모델명 확인·회수 방법·위험 여부 등의 기타 상담이 2,563건 19%, 피해구제신청 1,776건(13%), 배상 1,712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상담 10,376건 중 건강에 대한 상담 2,406건 23.2%, 호흡기, 피부질환, 폐질환, 암 순으로 조사돼

5월 한달 대진 라돈 침대 상담 10,376건 중 건강상 문제로 호소하는 상담은 2,406건(다중 응답으로 3,373건)으로 전체 상담의 23.2%로 분석되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6.3%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 14.1%, 이상증상, 폐질환, 암 순서로 각각 11.1%, 7.9%, 7.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두통, 유산, 난임, 부인과 질환, 정신적 피해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피해 현황 파악 등 현재 대진 라돈 침대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진 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아 5월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60일 안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 사례조사 및 위원회 개최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은 실정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책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대진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진 침대 피폭선량 조사결과 및 회수현황을 정보공개하라!

둘, 침대 및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및 피폭선량 결과를 정보공개하라!!

셋, 우체국 망을 통한 신속한 수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넷, 폐 관련 질환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다섯,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 상담 사례

사례1) 5월 9일에 온라인으로 침대 회수 신청한 후 바로 다음 날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5월 말까지 감감무소식이고 답답한 마음에 6월 1일에 한번더 회수신청을 하고 침대는 안방에 방치되어 하루하루 불안하다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5월 18일에 신청한 소비자는 31일에 회수 되었다고 한다. 피해 소비자들은 침대 회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사례2) 건강영향 방문 상담을 받기 위해 6월 2일 간단한 전화 상담을 거쳐 예약일을 정하고 6월 4일에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는 기침, 가래, 폐암만 관련 있고 나머지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하였다. 불안하여 폐암 검사를 하고 싶다고 상담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면서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검사를 하겠다면 본인 비용을 해야 한다고 하여 형식적인 상담의 느낌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사례3) : 2018년 5월 18일 대진침대 회수 접수를 했는데 회수가 안되어 화물로 직접 배송 의뢰함. 6월 7일 대진침대에 도착을 했는데 대진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모델이지만 생산년도가 2012년 이후인데 소비자가 사용한 모델은 2011년 웨스턴 슬리퍼 아니어서 회수 거부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였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 5월 일별 상담 건수 동향

상담일자	상담건수	상담일자	상담건수
2018년 05월 04일	151건	2018년 05월 18일	1,228건
2018년 05월 05일	3건	2018년 05월 19일	26건
2018년 05월 06일	1건	2018년 05월 20일	20건
2018년 05월 08일	121건	2018년 05월 21일	853건
2018년 05월 09일	73건	2018년 05월 22일	28건
2018년 05월 10일	74건	2018년 05월 23일	821건
2018년 05월 11일	49건	2018년 05월 24일	1,190건
2018년 05월 12일	2건	2018년 05월 25일	1,111건
2018년 05월 13일	2건	2018년 05월 26일	84건
2018년 05월 14일	59건	2018년 05월 27일	42건
2018년 05월 15일	75건	2018년 05월 28일	1,263건
2018년 05월 16일	274건	2018년 05월 29일	913건
2018년 05월 17일	634건	2018년 05월 30일	727건
		2018년 05월 31일	552건
합계	1,518건	합계	8,858건
총합계		10,376건	

□ 5월 소비자 요구 사항 변화

상담 내용	05.04 ~ 05.17 상담건수	05.18 ~ 05.31 상담건수	상담건수 차이	상담건수 증감율
매트리스 검사	30건수	626건수	596건수	1987%
교환	80건수	382건수	302건수	378%
기타	790건수	1,773건수	983건수	124%
반품	2건수	171건수	169건수	8450%
배상	193건수	1,519건수	1,326건수	687%
사과	1건수	8건수	7건수	700%
수리보수	1건수	건수	-1건수	-100%
피해구제신청 (집 단분쟁 조정신청)	17건수	1,759건수	1,742건수	10247%
환불	241건수	1,406건수	1,165건수	483%
회수	289건수	3,959건수	3,670건수	1270%
회신	1건수	349건수	348건수	34800%
총합계	1,645건수	11,952건수	-	-

□ 5월 4일~5월 17일 상담 중 건강상담 내용에 관한 상담 분석

건강 상담 내용		상담건수		백분율	
		5/4~5/17	5/18~5/31	5/4~5/17	5/18~5/31
호흡기질환		35	514	17.1%	16.22%
피부질환		29	445	14.1%	14.05%
암		24	233	11.7%	7.35%
천식		21	66	10.2%	2.08%
폐 질환		19	247	9.3%	7.80%
두통		15	188	7.3%	5.93%
갑상선 질환		14	193	6.8%	6.09%
갑상선 암		8	55	3.9%	1.74%
난임		7	15	3.4%	0.47%
산부인과 질환		5	104	2.4%	3.28%
유산		4	22	2.0%	0.69%
위염		3	10	1.5%	0.32%
스티븐존슨 증후군		1	0	0.5%	0.00%
심근경색		1	4	0.5%	0.13%
기타	이상 증상	8	365	3.9%	11.52%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 요청	4	206	2.0%	6.50%
	신체 정밀 검사 요청	3	144	1.5%	4.55%
	건강악화	1	225	0.5%	7.10%
	방사능 검사요청	1	29	0.5%	0.92%
	심리불안	1	56	0.5%	1.77%
	정신적 피해	1	47	0.5%	1.48%
총합계		205	3,168	100.0%	100.00%

□ 5월 전체 상담 중 건강상담 내용에 관한 상담 분석

건강 상담 내용	상담건수	백분율
호흡기질환	549건수	16.30%
피부질환	474건수	14.10%
이상증상	373건수	11.10%
폐질환	266건수	7.90%
암	257건수	7.60%
건강악화	226건수	6.70%
신체적 정신적피해보상요청	210건수	6.20%
갑상선질환	207건수	6.10%
두통	203건수	6.00%
신체정밀검사요청	147건수	4.40%
산부인과질환	109건수	3.20%
천식	87건수	2.60%
갑상선암	63건수	1.90%
심리불안	57건수	1.70%
정신적피해	48건수	1.40%
방사능검사요청	30건수	0.90%
유산	26건수	0.80%
난임	22건수	0.70%
위염	13건수	0.40%
심근경색	5건수	0.10%
스티븐존슨증후군	1건수	0.00%
총합계	3,373건수	100.00%